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
shlee@kiep.go.kr
-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장
hmhan@kiep.go.kr
-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sjyea@kiep.go.kr
-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swhong@kiep.go.kr
- 김남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nskim@kiep.go.kr
-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 재구축 방향을 모색함.
 -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춤.
- ▶ [제2장]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 설명력]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임.
 - [기업 성과 및 고용 증대 효과]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시사점]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
- ▶ [제3장]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함.
 - [미중 전략경쟁 주요 경과]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경과와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글로벌 확산 동향을 살펴봄.
 - [글로벌 투자 흐름 변화 분석]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해 최근 나타나는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주요 10개 산업 설문조사 결과]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과 '생산 비용 절감(20%)'을 가장

많이 선택함.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등을 꼽았고, 반면 기회 요인으로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함. 향후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베트남, 인도 순으로 나타남.

▶ [제4장]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4대 기본 정책 방향]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이라는 4개의 기본 정책 방향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국별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함.
- [미국] △정상·고위·실무·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 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속권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페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제5장] 앞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통상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

- [산업정책]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
- [대외·통상정책]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별 공장 건설 등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확대(TASK 사업 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기존 자유무역 질서하에서 장기간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구축되었던 한국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GPN)*가 구조적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구축 방향 모색이 시급해짐.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

- [목적]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목적 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목적 2]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
- [목적 3]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 [목적 4]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통상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

- [차별성]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여타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짐.

-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임.

-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임.
-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
-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
-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통상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①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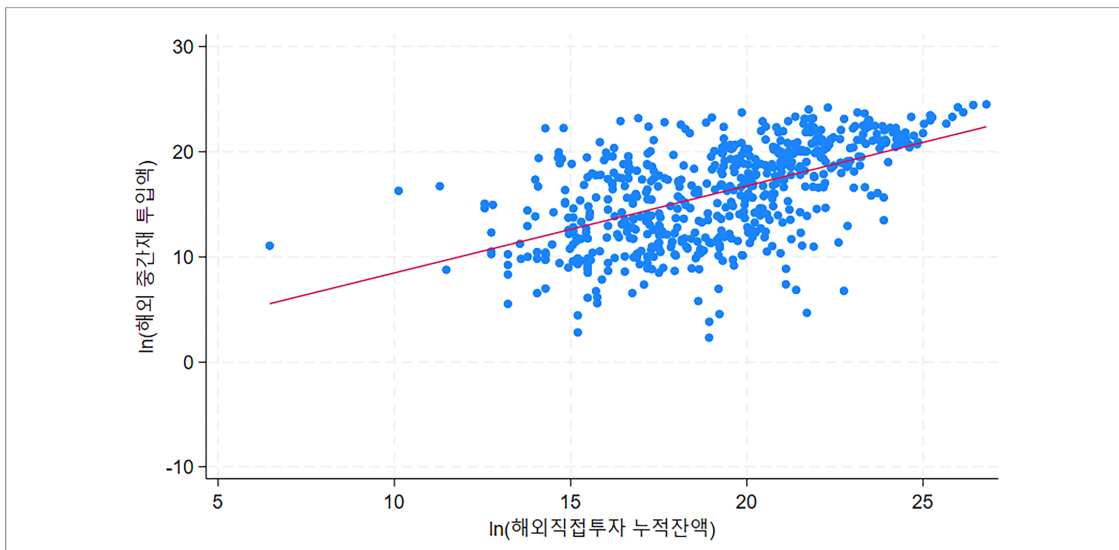
- [분석 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한국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중간재 수입 구조(해외 소싱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 형성에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가 얼마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실증 분석함.
 - 이로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해외직접투자가 기여한 바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급 구조 효율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의 변화] 산업별 이질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요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됨.
 - [분석 자료 및 방법] 한국은행의 기본부문투입산출표(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실측표)와 UN Comtrade 수출입 자료를 비서비스업 74개 부문으로 연계하여 분석

- [분석 결과] 산업별 주요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을 참고.
- [시사점]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중국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첨예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가 가진 취약성을 시사함.

● [해외직접투자자와 해외 소싱의 상관관계] 2005~20년 기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주요 산업 해외 소싱 구조 변화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로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

- [분석 자료 및 방법] 이전 분석에서 구축한 국내 주요 산업의 상대국-산업별 중간재 투입액 자료(국내 주요 산업 8개×242개국별 74개 산업)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상대국-산업별 해외직접투자(OFDI) 누적잔액¹⁾ 자료를 활용하여 4개 연도(2005, 2010, 2015, 2020년)에 대한 조건부 상관관계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
- [주요 분석 결과] 특정 국가 및 산업으로의 한국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로부터 국내 주요 산업으로 유입되는 중간재 투입액이 0.05달러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상대국이 중국이나 베트남일수록, 그리고 국내 반도체나 통신기기, 화학,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중간재 수입일수록 더 강한 양(+)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보임.

그림 1.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해외 중간재 투입액 간의 산점도



주: 각 점은 2005, 2010, 2015, 2020년의 4개년 중 한 연도의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자연로그 값과 해당 연도에 해당 국가로부터 한국의 8개 주요 산업이 공급받은 해외 중간재 투입액 자연로그 값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N Comtrade 무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자료 등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1) 누적잔액은 누적순투자금액을 의미한다.

- [시사점] 이 분석 결과는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성비 높은 중간재의 해외 생산을 가능케 하고, 이를 역수입함으로써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의 토대로 일정 부분 기능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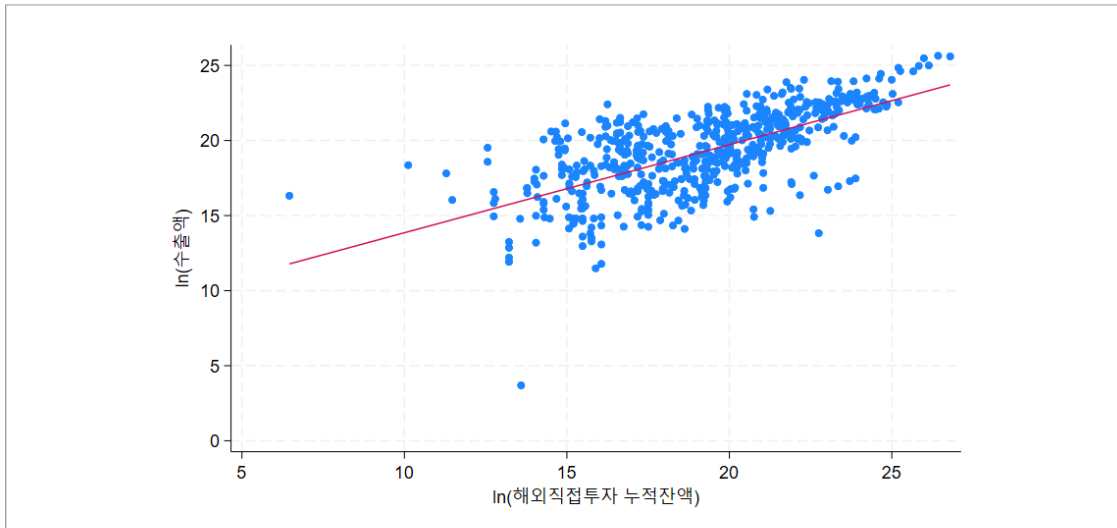
②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 [분석 배경 및 목적] 한국기업 해외 법인의 매입 구조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매입 비중을 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여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 해외 현지 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가 수출 증가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실증 분석함.
 - 이로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해외직접투자가 기여한 바를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통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 변화]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 매입(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국가 및 산업별로 상이한 변화가 관찰됨.
 - [분석 자료 및 방법]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2019년, 2023년 기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국가별 및 제조업 산업별 매입 구조를 분석
 -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해외 진출 기업의 ‘한국 매입(수출)’ 비중은 평균 40.7%로 수출 유발 효과가 큼을 보여줌.
 - [국가별] 미국 진출 기업은 한국 매입 비중이 2014년 49.6%에서 2023년 59.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 진출 기업은 동 기간 한국 매입 비중이 감소(2019년 34.6% → 2023년 24.5%)하고 현지(비관계사) 매입 비중이 증가(33.7% → 49.6%)함. 베트남은 한국 매입 비중(42~43%)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됨.
 - [산업별] 주요 제조업 중 전체 한국 매입의 약 2/3를 차지하는 자동차(35.6%)와 전자(41.4%) 산업에서 한국 매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 매입 비중이 2014년 22.1%에서 2023년 35.6%로 크게 증가함.
 - [시사점] 해외 진출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이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줌.
-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2005~20년 기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특정 국가 및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OFDI 증가가 해당 국가 및 산업 관련 상품의 (중간재) 수출 증가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
 - [분석 자료 및 방법] 한국수출입은행의 상대국-산업별 OFDI 누적잔액 자료(국내 주요 산업 8개×242개국별 74개 산업)와 UN Comtrade의 수출액 자료를 결합하여 4개 연도(2005,

2010, 2015, 2020년)에 대한 조건부 상관관계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

- [주요 분석 결과] 특정 국가-산업으로의 한국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산업 관련 상품 수출이 0.96달러(중간재의 경우 0.89달러)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멕시코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수출액 간의 산점도



주: 각 점은 2005, 2010, 2015, 2020년의 4개년 중 한 연도의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자연로그 값과 해당 연도에 해당 국가에 대한 한국 수출액의 자연로그 값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N Comtrade 무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자료 등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시사점] 이 분석 결과는 ‘OFDI를 통한 해외 생산 기지 건설 → 국내 중간재 수출 증가’라는 공식이 주효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며,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되어왔음을 시사함.

③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 [분석 배경 및 목적]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 생산거점 확충이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기대와, 반대로 일자리 유출 등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함. 이에 기업 수준의 장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적 해외직접투자가 실제 국내 정규직 고용 창출 및 매출·수출 실적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봄.

- [분석 자료 및 실증적 추정 모형] 통계청 ‘기업활동조사(2006~23년)’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해 기업 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
 - 핵심 변수 설정: 종속변수로 ‘국내 정규직 고용 규모’, ‘매출액 실적’, ‘수출액 실적’을 설정하고, 핵심 설명변수로 각 기업의 ‘연도별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을 활용함.
 - 도구변수 도입: 해외투자와 기업 성과 간의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Desai *et al.*(2009)의 도구변수 구축 원리를 준용하여 각 기업이 투자한 목적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
 - 통제변수: 기업의 업력(비선형 효과 통제를 위한 제곱항 포함), 자산 규모, R&D 지출 비중
- [주요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의 국내 고용과 매출 실적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누적 해외투자액이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해당 기업의 국내 정규직 고용 규모가 확대되고, 매출액 실적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함. 수출 실적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 기업 성과 및 고용 창출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100인 이상 규모의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시사점]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 확대 및 생산망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매출 및 고용 향상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왔음을 시사함.

2)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①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 [분석 배경] 미중 관계가 과거 수십 년간의 협력적 관여(engagement)에서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으로 전환됨
 - [미국의 인식 변화와 ‘차이나 쇼크’]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수백만 개가 소멸하며 초당적인 대중 강경 노선이 형성됨. 또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 중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수용하고 정치적 자유화를 이룰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도 실현되지 않음(미국의 전략적 기대 실패).
 - [중국의 부상과 도전] 중국은 WTO 가입 등 국제 시스템의 혜택으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유지하며 기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음.

- [패권 도전 인식]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을 자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인식함.

● [전략경쟁에 대한 미중 양국의 시각] 불공정 관행의 시정 vs.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 [미국의 시각] 기술 권위주의에 대한 견제
 - 중국의 시장 질서 왜곡: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 이전 등 구조적 불공정성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비판
 -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 '중국제조 2025'를 미국 핵심기술 분야(반도체, AI 등)를 추월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인식하며, 중국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 추구자로 규정
 - 이념적 대립: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구도로 보며, 중국의 통치 모델 확산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중국의 시각] 강국으로의 부흥과 발전권
 - 중국몽(中国梦):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한다는 장기 목표 추진 중
 - 미국의 '억제' 전략에 대한 반발: 미국의 관세 및 기술 통제를 자국의 정당한 발전을 저지하려는 패권적 '억제(Containment)' 전략으로 간주
 - 체제 자신감과 자립: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 관세 전쟁의 심화와 2025년의 '스몰딜'

- [트럼프 1기(2018-2020)]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4차에 걸친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전면적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2020년 1단계 합의로 잠시 유예
- [바이든 행정부(2021-2024)] 트럼프의 관세를 계승하되 전기차(25% → 100%), 반도체(25% → 50%)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선별적/집중적 압박을 강화하고, 동맹과의 '연대(Align)'를 통해 대중 견제의 정당성을 확보
- [트럼프 2기(2025년)] 상호관세 도입과 IEEPA 발동으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2025년 9월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는 57.6%까지 상승
- [부산 정상회담(2025. 10. 30.)]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관세 일부 인하 및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스몰딜(Small Deal)에 합의하며 잠정적 휴전에 도달 → 근본적 해결이 아닌 제한적인 갈등 관리 조치
 - 미국의 조치(양보): 펜타닐 관세 10%p 인하(20% → 10%), 대중 평균 관세율 인하(57% → 47%), 추가 100% 관세 철회; Entity List 확대 조치 1년 유예, 해운·조선 301조 조치 1년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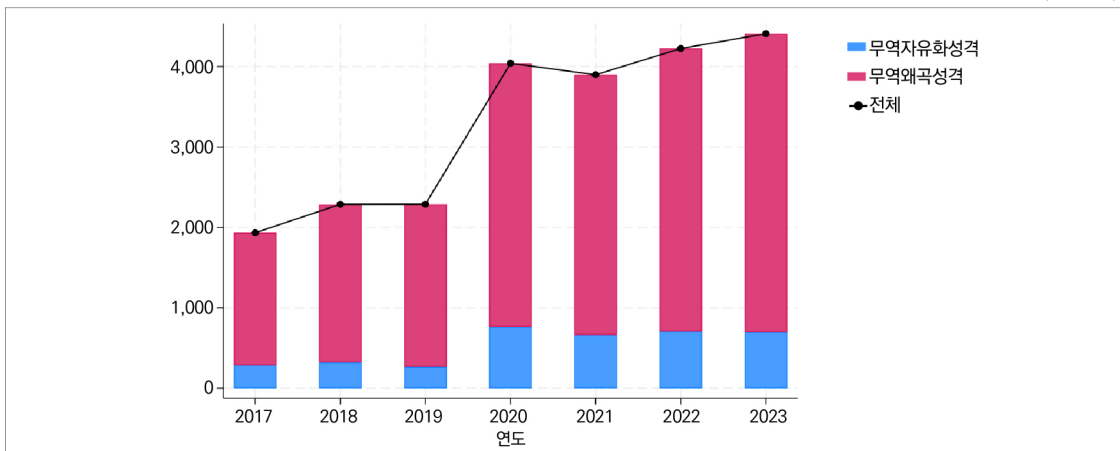
- 중국의 조치(양보): 미국 내 펜타닐 전구 물질 등 합성마약 차단 협력 강화,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재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미국기업 반독점 조사 중지

● [자국중심주의적 글로벌 통상 기조의 강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촉발된 경제안보 중심 산업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지경학적 분절화

- [지경학적 분절화] 기존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시대로 변화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안보가 통상 질서의 핵심이 되었음.
- [경제안보 중심 산업정책의 확산] 2019년 이후 무역 왜곡 성격의 산업정책 도입이 급증했으며, 미국(IRA, CHIPS법), 중국(중국제조 2025), EU(CRMA)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보호 및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림 3. 글로벌 산업정책 추이(2009~23년)

(단위: 건)



자료: 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NIPO).

- [관세 및 수출통제의 일상화]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과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등) 무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
- [FDI 심사 강화 및 블록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EU, 중국 등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자를 규제하면서 상호 투자가 급감하고, 무역이 동일 진영 내로 집중되는 지역 블록화가 진행

②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 [분석 목적 및 방법]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중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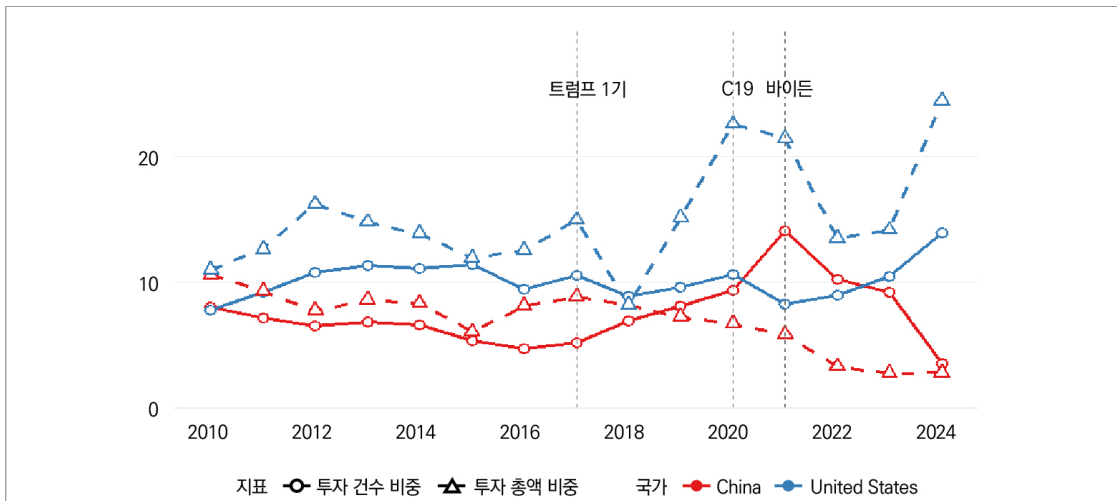
- Orbis社가 제공하는 Crossborder Investmen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주요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최근까지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국가 및 산업 단위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조망

-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변화] 미국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밖에 북미/남미 국가 비중도 함께 상승(부록 그림 1, 부록 그림 2 참고)
 -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제조 국가의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
 - 미국 외 북미 및 중남미 국가로 향하는 글로벌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니어쇼어링 전략과 북미 지역 내 경제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 [미국과 중국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의 도착지로서 미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감소
 - 이러한 감소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두드러짐 →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그림 4.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추이(201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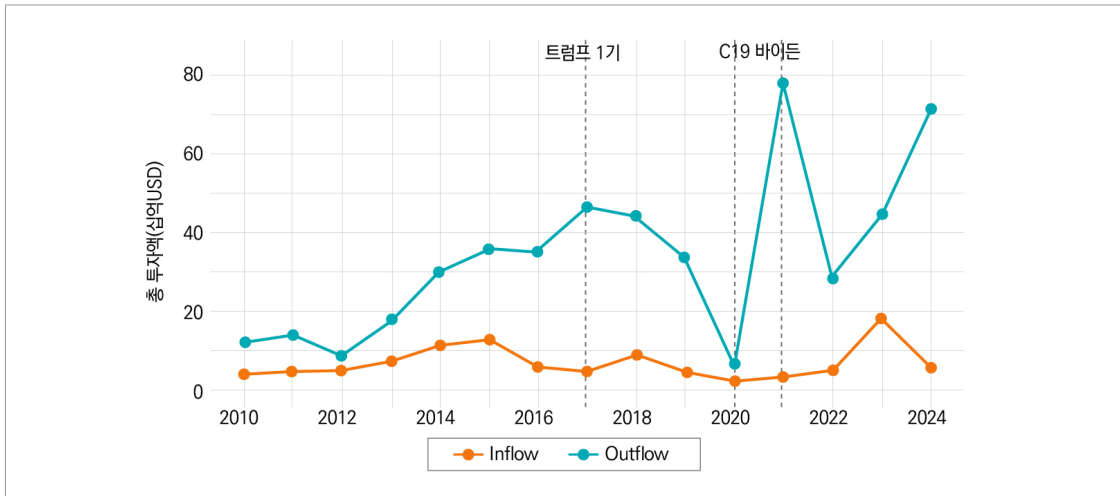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한국의 FDI 구조] 한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 중심
 -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중심 구조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국가에서의 입지 확대 및 현지화 추세를 반영

그림 5.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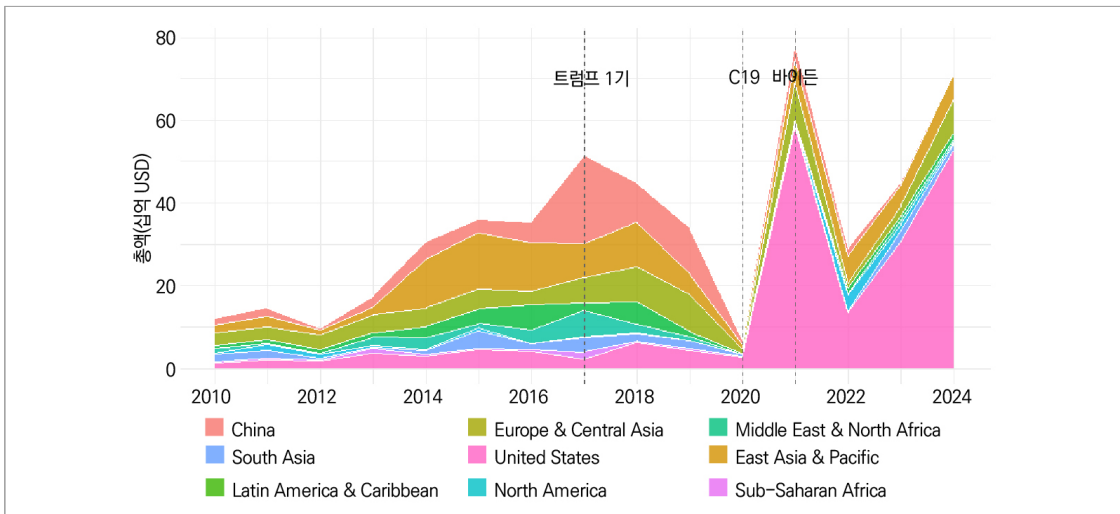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한국의 지역별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최근 한국기업들의 지역별 해외투자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크게 확대된 반면, 대중국 투자는 감소
- 미국과 중국 외 주요 투자 지역으로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확인

그림 6. 한국의 지역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③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 [설문조사 목적] 한국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아래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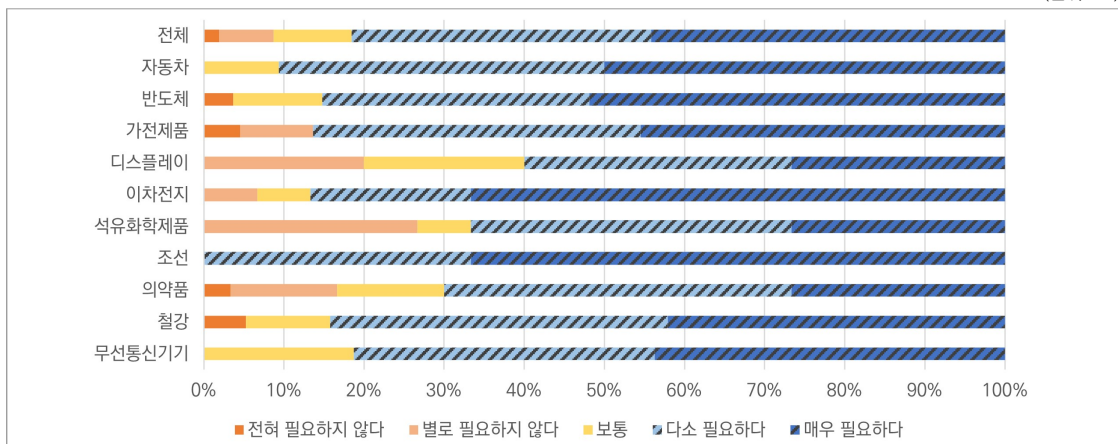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 대상 (10개 산업: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조선, 의약, 철강, 무선통신기기) ① 전문가: 협단체 소속 전문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학계 전문가, 산업 애널리스트(평균 경력 15년) ② 기업 실무자: 100인 이상 규모 기업 소속 실무자(평균 경력 13년)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방법	혼합방식(Mixed Method) - 온라인 조사: 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ing, 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ing - 전화 조사: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자료 수집	클라이언트 제공 전문가 리스트 활용 및 갤럽 패널 활용
표본 수	총 206명(전문가: 67명, 기업 실무자: 139명)
조사 일시	2025년 8월 11일~2025년 9월 12일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 전체 응답자의 81.6%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매우 필요하다 44.2%, 다소 필요하다 37.4%)
 - 특히 조선과 이차전지 산업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매우 높았고,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또는 ‘다소 필요하다’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음.

그림 7.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시 최우선 고려사항] 전체적으로는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 ‘생산비용 절감(20%)’, ‘선진 시장(미국) 접근성 강화(1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응답 비율 차이가 존재(부록 그림 3 참고).
 - 앞서 언급한 고려사항 외에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를, 가전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산업의 경우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확보’를, 이차전지와 석유화학제품 산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 1순위 위기 요인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2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자국 우선 산업정책(16%)’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부록 그림 4 참고).
 -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산업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철강(42%), 자동차(31%), 가전제품(36%)과 당시 품목별 관세 조치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반도체(26%), 의약품(37%), 무선통신기기(50%) 등임.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주된 위기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제품(47%)이며, ‘보조금 등 자국 우선 산업정책’을 주된 위기 요인으로 꼽은 산업으로는 디스플레이(40%), 이차전지(27%) 산업이 있음.
 -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6%)’보다도 ‘주요국의 핵심품목 수출규제(37%)’를 주된 위기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더 높았음.
-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기회 요인] 1순위 기회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응답은 ‘주요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시장 확보(28%)’,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다변화 계기(19%)’ 등이었음(부록 그림 5 참고).
 -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시장 확보’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산업은 자동차(34%), 디스플레이(47%), 이차전지(47%), 조선(47%), 의약품(27%), 무선통신기기(38%) 등임.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를 주된 기회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반도체(26%), 가전제품(36%), 철강(21%) 등이었으며, 자동차(34%)도 ‘주요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시장 확보’만큼이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를 주된 기회 요인으로 꼽았음.
- [추후 해외직접투자 확대 유망 국가]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1순위 기준 미국이 49%로 압도적인 응답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 순으로 많은 응답을 받음(부록 그림 6 참고).
 - 미국을 선정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미국 등 선진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였음.

-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산 비용 절감'과 '중국 의존성 완화'였음.
- 인도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산 비용 절감'과 '미래 시장 확보'였음.

3. 정책 제언

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총론)

- [기본 정책 방향 1] 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확대 및 고도화
 -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은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 수단
 - 해외 생산 및 판매/제3국 수출 거점 마련 → 생산 효율화/수출경쟁력 향상 → 국내 매출 및 고용 향상(앞선 실증분석 결과 참고)
 -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위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Win-Win 전략에 위협으로 작용
 - 고관세정책 및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제 혜택 → 주요 산업의 고부가가치 공정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할 유인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새로운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생산하던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위험(앞선 설문 조사 결과 향후 해외직접투자 확대 국가로 49%가 미국을 1순위로 꼽음)
 - 높아진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 여전히 국내에 남아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고 고부가가치 공정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 구조 형성 필요
 -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R&D 예산 확대,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대, 혁신적인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
- [기본 정책 방향 2]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 그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선진국에 대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혁신 채널을 확보
 - 고기술 업종 미국기업 M&A → 미국 내 특허 성과 ↑ →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 매출과 영업이익 ↑ (김종덕 외 2023)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국 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EU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FDI Screening System)」, 중국의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 등

- 대미 시장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첨단 산업 기업과의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
 - 우리나라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 관련 첨단 기술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협력 플랫폼 설치 및 기능 고도화 필요
- [기본 정책 방향 3]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의 제고
 -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
 - 앞선 설문조사에서 기회 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주요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확보’
 - 이는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이 주요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경쟁력 높은 제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과 연관
 -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들로 구성된 국내 제조 생태계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수출 경쟁력을 견인한 주요 원동력(간접수출(구경현 외 2023) 및 국내 생산 부가가치에서의 중소기업의 높은 비중 참고)
 - 주요 산업 국내 제조 생태계 핵심 역량의 보호 및 고도화 → 제조업 기반 취약 국가와의 경제 협력 지렛대로 사용
 - 뿌리 산업 및 핵심 소부장 산업의 경영 안정 지원 강화, 생산 기술 자동화 및 AI 활용 지원, 국제화 역량 강화 지원, 제조 생태계 구축 관련 민관 역량 육성 등
- [기본 정책 방향 4]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
 - 다양한 지역에 대한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가 유의미한 수출 지역 다변화의 핵심 선행 조건
 - 특히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무형의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국제통상질서 아래서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효과적인 시장 확대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 잠재성 있는 신흥 개도국에 선제적인 해외직접투자자로 그들의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돕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적 원칙 필요
 -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미국으로의 투자쏠림 현상은 미래 유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과소투자를 우려하게 함.
 -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 부분 미국으로 집중(제3장 2절), 우리나라 주요 기업 전문가 및 기업인 등이 향후 투자를 확대해야 할 1순위 국가로 과반 이상 미국 선택(제3장 3절)

- 글로벌 사우스 신흥 대국의 사업 환경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 기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항구적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설 채널을 확립, 상대국의 자체적인 제조업 기반 마련 및 기술 습득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 의제를 발굴

2)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각론 1): 주요 상대국별 정책 과제

① 미국

● [대미국 정책 과제 1] 정상·고위·실무·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 [필요성] 미국의 정책 변동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 관리 및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필요
 -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임 이후 감세 법안이 등장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에 영향
 -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순환적 성장의 통로가 되려면 중간재와 부가가치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흔들림 없는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현 제도] 현재 한-미 간에는 공급망과 산업, 경제와 에너지, 과학기술과 전략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의 채널이 운영 중이나 보완 필요
 -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함께 하는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 Commercial Dialogue),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대표적인 대화채널
 - 이외에도 한-미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체계 속에서도 공급망 협의를 진행 중
 - 해당 협의 채널들은 양국의 공조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으나, 한-미 협의 의제 이행 관리의 일관성 측면이나 민간 기업 의견의 적시 반영 측면 등에서 한계를 보임.
- [보완 방향] 정상, 고위, 실무,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다층 정례 거버넌스 구축
 - 개별 이슈에 대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정상급(전략 방향 제시), 고위급(부처 간 쟁점 조정), 실무급(규정·절차 개선안 마련), 민간(현장 수요 상시 제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층 정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 중인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 기술 표준과 인증의 상호 협력 확대, 제조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과 원격 유지보수 협력, 물류 거점의 병목 완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의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음.

- [대미국 정책 과제 2]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 [필요성] 최근 한국의 대미 생산 네트워크 확대는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경쟁력 제고보다 미국의 신기술, 혁신 생태계, 대형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큼. → 한미 기술 협력 강화 촉진을 위한 양국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대미 생산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될 필요
 - [보완 방향] 비자·체류 여건 개선 및 교육·훈련·자격 인증의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추진
 - 비자 및 체류 자격과 관련된 행정 개선을 통해 한미 간 인력 이동 및 현장 정착 지원
 - 반도체·배터리·소재·설비 등 숙련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기업, 지역 정부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현지 고용시장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강화
 - 한-미 공동의 실무형 인턴십과 산학 공동 프로그램의 정례 운영 및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원
- [대미국 정책 과제 3]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필요성] 2025년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별 관세 인화와 대미 투자 집행(약 3,500억 달러 규모)이 결합된 패키지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이행할 특별법이 마련됨. → 해당 투자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제시 필요
 - [보완 방향]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를 중심으로 미국과 생산·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인프라·설비 공급 역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여 대미 투자가 한국 수출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로 환류되는 구조 구축이 필요
 - 조선 산업에서는 정책금융 지원 및 한미 양국의 조선 관련 실무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 연료 전환과 항만 에너지 인프라 확충, 고효율 선박 기술 상용화 등에서 한-미 공동 프로젝트 추진
 -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 등의 차세대 전략 산업에서도 기술 개발-중간재 생산-시장 납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한미 양국에 분산 재배치함으로써 시장 접근을 제고하고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
 - 전력, 용수, 송전과 같은 미국 내 인프라 재구축을 투자 패키지 안에 구조화하고 한국의 관련 산업 역량을 연계하여 '대미 투자-현지 인프라 구축-한국산 설비·부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② 중국

● [대중국 정책 과제 1]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 [필요성] 그동안 한국기업들이 중국을 대세계 수출을 위한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중국 내 생산설비들을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 모색 필요
- [보완 방향]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현지 시장을 겨냥한 현지 완결형 생산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 혹은 중국과 일대일로로 연결된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함.
 - [예시 1] 석유화학 -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한국기업의 기존 사업 부문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기존의 범용 제품군 생산 대신 고부가가치의 정밀 제품군(친환경 플라스틱, 고기능성 폴리머 등) 생산으로 전환하여 중국 시장을 지속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
 - [예시 2] 자동차 - 중국 내 설비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과거 내수시장에 대한 공급 위주 사업에서 내수 시장 공급과 해외 수출시장(예: 중국과 무역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일대일로 연관 국가)에 대한 공급을 병행하는 생산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

● [대중국 정책 과제 2]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그린 전환), 신에너지 영역 등과 같이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서 지정학적 민감도가 낮고 양국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과 시장 진출 확대 필요
 -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피크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향후 5년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우리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의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할 예정
- [보완 방향] 수소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확대
 - [예시 1]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중국의 상용차 제조 역량의 결합(최근 현대자동차와 카이위 그룹이 공동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버스)
 - [예시 2]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분야에서의 협력(차세대 DC 급속 충전 표준 개발을 위한 중국 전기협회(CEC)와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 참고)

● [대중국 정책 과제 3]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필요성]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과거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위치에서 벗어나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
 - 한국기업은 중국의 혁신 능력을 흡수하거나, 우리의 우위에 기반한 틈새 시장을 활용해 해당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보완 방향] 인공지능 기반 의료 분야와 같이 한중 양국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 모색
 - 한국의 고품질 의료 인프라와 ICT 융합 기술, 중국의 대규모 임상 환경 및 빅데이터 기술, 글로벌 인증 노하우 등을 상호 접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이를 위해 고품질 의료 데이터 연합 학습 협력, 기술 라이선싱 및 상호 이전, 의료 데이터 표준화 공동연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논의 등 추진 필요

③ 인도

- [인도의 중요성]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이는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최대 인구(14억 명) 및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글로벌 제조 및 수출 허브로 부상
- [대인도 정책 과제 1]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 [필요성] 인도가 전략 산업의 내재화와 자립을 강조하는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단순 수출 중심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CEPA 개선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 직접투자, 개발협력, 기술 이전, 인적 교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장기적인 협력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임.
 - [현 제도] 2010년 CEPA 발효 및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코리아 플러스 출범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졌으나 보완이 필요함.
 - 2020년대 들어 팬데믹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안보 및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고 주요 열강과의 외교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인도 간 정상 및 장관급 교류의 추진력이 약화되며 가시적 진전이 제한적이었음.
 - [보완 방향] 연례 정상회의 정례화 및 고위급 상시 점검 체계 고정
 - 연례 정상회의를 제도화하여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공급망, 첨단기술, 인력 이동 등 핵심 의제의 타임라인을 정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확장해 재무부, 산업부, 과기부의 상설 참여를 보장하고 상시 점검 체계로 고정하며, 이를 차관 및 고위 실무급 플랫폼으로 뒷받침하여 공급망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
- [대인도 정책 과제 2]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 [필요성] 인도는 운송, 에너지, 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 투자가 이뤄지는 거대 시장이나, 한국 중소기업은 주(州) 정부별로 상이한 규제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단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 단위 접근을 넘어 산업,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형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

- [보완 방향] 공적자금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산업단지 및 인프라 연계형 진출 지원
 - 인도의 국가물류정책(NLP)과 가티샷티에 정렬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전용 필지 구역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용 설비와 원스톱 인허가 데스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진출 불확실성 완화
 - 산업단지 내에 기업 수요 연계형 훈련센터를 설치해 표준화된 한국형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인력 수급을 돕고 품질·안전 및 생산성 격차 해소 지원

● [대인도 정책 과제 3]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필요성] 한국의 첨단 제조 경쟁력과 인도의 우수한 ICT 인력 및 거대 내수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양국의 인적 교류는 단기적인 연구 교류나 기관 간 MOU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이었음.
- [보완 방향] 전략 산업 중심의 합법적 고숙련 인력 이동 확대 및 주요 산업 거점별 네트워크 강화
 - 반도체, 디지털·AI, 자동차(EV), 제약 등 첨단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장기 체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합법적 고숙련 인력 이동 경로를 신설하여 현장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 촉진
 - 인천-델리 중심의 직항 체계를 단계적으로 주요 산업 거점으로 확대하고, 벵갈루루(반도체, 디지털·AI), 타밀나두(조선·항만, EV), 노이다·마하라슈트라(전기·전자), 하이데라바드(제약) 등 거점별 특성에 맞춘 인적 교류와 공동 R&D 네트워크 강화

④ 베트남

- [베트남의 중요성] 한국의 아세안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동아시아 공급망 및 글로벌 생산 허브 국가로서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확대가 가속화되는 중임.

● [대베트남 정책 과제 1]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 [필요성] 베트남의 첨단 산업 육성 니즈와 한국의 첨단 소부장 고도화 및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맞물림.
 - 최근 베트남은 단순 조립 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자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핵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 역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소부장 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며,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비해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보완 방향] 양국의 니즈를 결합하여 베트남을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대체지이자 보완지로 육성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등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한·베 기술 대학 등을 통해 현지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켜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및 베트남 민간 기업의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
 - 중국의 디스플레이 수출 확대 및 중·아세안 FTA(CAFTA) 3.0 체결 등 통상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여, 베트남의 중간재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
 - 전기·전자,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 협력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식량,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등으로 공급망 범위를 다변화하고, 디지털 전환(DX) 및 그린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여 공급망의 질적 고도화도 함께 추진
 - 베트남 정부의 '정치국 결의안 제68호(민간 주도 경제성장 및 대기업 육성)'에 맞춰 한국의 대기업 육성 노하우 전수, 벤처캐피탈(VC) 연계, 기업 간 기술 이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는 지렛대로 활용
- [대베트남 정책 과제 2]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 [필요성] 한국의 최대 ODA 대상국인 베트남에 유무상 공적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과거의 소규모 ODA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베트남의 전략적 인프라 구축과 경제 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함.
 - [보완 방향] ODA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서비스 연계 비용 절감,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
 - 베트남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민간경제 육성과 제조업 고도화 지원, 그리고 베트남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ODA를 적극적으로 확대
 - 전략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을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 효율성 극대화
 - 대베트남 ODA 확대를 통해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베 양국 간의 공급망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경제 협력 전략으로 활용
- [대베트남 정책 과제 3] 한·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필요성]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와 거대 소비시장 부상에 발맞춰, 한·아세안 협력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베트남을 역내 공급망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함.

- 아세안은 풍부한 인구와 투자 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 증가 및 중산층 확대와 더불어 거대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보완 방향] 아세안이 ‘공동체 비전 2045’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아세안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주변국으로 확장 및 연계하는 전략 필요
 - 한·베트남 공급망을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아세안 역내 완결적 공급망 구축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
 - 이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대미 통상 현안 등을 해결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게 함.
 - 동시에 통관 효율화를 통해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 공급망의 신뢰도를 결합하는 계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거대 시장,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아세안의 중립 요충지로서 베트남에 치중된 기존 한국-아세안 생산 네트워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대인도네시아 정책 과제 1]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연계 발전 논의
 - [필요성] 한국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자동차(이차전지 포함), 석유화학 등 3대 유망 협력 업종 간의 거대한 상호 보완적 생태계 구축 잠재력 활용 필요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의 가장 유망한 주요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힘.
 -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의 합작 제철소,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및 배터리 셀 공장,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현지 투자가 진행 중임.
 - 이 핵심 산업들은 일방향 공급망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거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 극대화가 요구됨.
 - [보완 방향]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산업 협력을 넘어 세 산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발전 방향을 협력 어젠다로 추가
 -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세 산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발전 방향을 주요 협력 어젠다로 채택해야 함.
 - 이 세 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은 현지에서 ‘자원 → 소재 → 제조 → 그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통합형 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대인도네시아 정책 과제 2]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 [필요성]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국 내 제련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여, 기존의 단순 수입 중심 전략에서 벗어난 장기적 공급망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필요
 - 니켈, 보크사이트 등 핵심 원자재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임.
 -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광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국 내 제련을 의무화하는 다운스트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수입 위주의 기존 전략은 한계에 직면함.
- [보완 방향] 현지 투자를 기반으로 상류 단계(채굴, 제련) 투자와 하류 제조 단계를 연계하는 가치사슬 공유형 협력 체계 지향
 - 광물 공급망의 상류(Upstream) 단계에서는 직접투자와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 중인 제련 및 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 논의 초기 단계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적 금융 지원 검토
 - 하류 단계에서는 채굴-제련-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원책을 고려
 - 이후 각종 표준, 인증, 물류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도 양국 간 핵심 협력 이슈로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대인도네시아 정책 과제 3] 주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협력 추진

- [필요성]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인 국산부품사용의무(TKDN)와 사전수입 승인제도(PI)가 한국기업의 수입 조달과 생산 활동을 제약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 이후 거의 전 산업에 걸쳐 TKDN 비율을 80%로 확대할 방침
 - 수입 쿼터 제도인 PI 또한 정기적으로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납기 지연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음.
- [현 제도] 인도네시아가 시행 중인 TKDN, PI와 같은 규제들은 단순한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산업 내재화 정책이 반영된 규제이므로 신속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규제 파악과 대응을 지원 중임.
- [보완 방향] 맞춤형 현지화 로드맵 제언 및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중장기적 규제 완화 협상 지속
 - 단기에 현지화가 용이한 부품과 그렇지 못한 첨단 부품의 현지화 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현지화 방안을 인도네시아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CEPA 이행위원회', 'TBT Working Group' 등 주요 양자 채널을 통해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핵심 의제로 지속 요구해야 함.
 - 필요에 따라 한국의 표준, 기술, 디지털 행정 역량을 공유하여 인도네시아의 규제 개선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한국의 투자 활성화 및 인도네시아 산업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윈-윈 효과를 도모해야 함.

⑥ 멕시코

- [멕시코의 중요성]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미국 수출을 위한 주요 생산기지로서 가치가 더 높아졌으며 추후 대중남미 수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매력을 지님.
- [대멕시코 정책 과제 1]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 [필요성] 한국기업의 멕시코 현지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미국 시장과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은 주 생산 모델, 운송 경로, 멕시코가 체결한 무역협정 세부 조항(USMCA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중간재 조달과 조립 과정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및 글로벌 통상질서의 급변으로 멕시코의 생산 비교우위가 축소되고, 멕시코가 소극적이지만 교역 파트너 다변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정하면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이 조성됨.
 - [보완 방향] 수출 시장별 맞춤형 생산 라인 분리 및 중남미 역내 수출거점화
 -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기업들이 미국 수출용과 중남미 내수용 생산 라인 및 거점 지역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모색
 - 아울러 멕시코를 단순 미국 우회수출 기지가 아닌 중남미 역내 신흥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여 멕시코의 중남미 역내 수출을 위한 제조업 생태계 구축 정책과 부합하는 윈-윈 전략 창출
- [대멕시코 정책 과제 2]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간 협력 채널 강화
 - [필요성] 미국 중심 공급망 편입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및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공고화 필요
 - 기존 한국기업들은 멕시코에 후발주자로 진입해 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의존함으로써 멕시코 현지 글로벌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범위가 협소했음.
 - 향후 USMCA 재협상에서 미국산 중간재 사용 확대가 요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특정 OEM에 편중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고객사 다변화 및 타국 글로벌·로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시급함.
 - [보완 방향] 멕시코 주 정부 및 핵심 산업 중심으로 밀착형 협력 플랫폼 구축
 - 멕시코 누에보레온(Nuevo Leon) 주와 같이 니어쇼어링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주 정부를 중심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 추진
 - 멕시코 정부 및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한국정부 및 멕시코 산업계 간 협력 방안 구체화

● [대멕시코 정책 과제 3]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필요성] 내연차 및 전기차 가치사슬 상류 부문 투자 촉진과 멕시코 내 중국산 중간재 대체 수요 선점 필요
 - 미국의 강경한 중국 견제와 중국 우회수출 통제 압박으로 멕시코 내 중국산 부품 조달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 수요가 틈새시장으로 부상함.
 - 멕시코 내 전기차 생산 확대 및 향후 USMCA 역내 가치사슬 공고화 가능성에 대비해 단순 조립을 넘어선 배터리 및 부품의 현지 조달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 [보완 방향] 자동차 상류 부문 밸류체인 진출 지원 및 중국산 대체 틈새시장 적극 공략
 - 자동차 단순 조립 공정 이전 단계인 핵심광물 채굴, 배터리 핵심 소재, 자동차 부품 등 내연차 및 전기차 가치사슬 상류 부문에 대한 멕시코 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수단 마련
 -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멕시코의 특성을 활용해, 멕시코 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의 중간재를 대체함으로써 미국 중심 북미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 제고

⑦ 브라질

● [브라질의 중요성] 대규모 소비시장을 보유하여 내수 기반 생산기지로써 유망할 뿐만 아니라 대중남미 수출 거점국으로서도 잠재력이 풍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도 가치가 높음.

● [대브라질 정책 과제 1]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 [필요성] 신흥시장 확보를 위해 폐쇄적 지역주의 특성을 지닌 브라질 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 및 투자 진출 전략 필요
 -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이고 향후 꾸준한 수요 발생이 예상되지만, 전통적으로 통상환경이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단순 수출 방식으로는 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음.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브라질 정부는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보완 방향] 현지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맞춤형 현지 생산 기반 및 지원 체계 구축
 - 자동차(전기차 중심), 농기계 등 기타 제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브라질의 공공조달 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보급형 제품을 모색하거나 현지 AS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현지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높은 진입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대브라질 정책 과제 2]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 [필요성] 브라질의 교역 파트너 다변화 기조를 활용한 새로운 공급망 편입 및 수출 거점화 필요
 -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브라질은 중남미 역내국과의 교역 확대 도모,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발효 가능성, 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 등 교역 파트너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방화 움직임은 과거의 폐쇄적 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브라질을 단순 내수용 생산기지만이 아니라 중남미 역내·외 수출거점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킴.
- [보완 방향] 브라질 시장 진출 이후 중남미 주변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공급망 구조 설계
 -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을 거점으로 삼아 향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 브라질이 포함된 글로벌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공급망 참여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환경 기준이나 노동 규정 등 규제 대응력을 높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해야 함.

● [대브라질 정책 과제 3]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플랫폼 유지·확대

- [필요성]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 시급
 -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브라질과 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한국 역시 신속한 소통 및 협력 채널 확보가 필수적임.
 - 향후 브라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환율 변동 등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브라질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협력 기반이 필요함.
- [현 제도] 과거 아세안 중심의 정책과 교역파트너로서 브라질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인해 브라질 거점화 전략이 미흡했으나, 양국 간 기초적인 정부 협의체는 구축되어 있음.
 - 과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로 제조 거점을 구축하고자 했던 정책 기조와 브라질 내수시장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인해 전략적 거점화 방안 마련이 늦어졌음.
 - 그러나 현재 브라질과는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유용한 정부 간 협의체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
- [보완 방향] 기존 협의체의 재가동 및 민관협력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 플랫폼으로의 발전
 - 단기적으로는 기구축 협의체들을 즉각 재가동하고 활성화하여 유망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MOU를 체결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초석을 다져야 함.
 -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과 브라질 정부 및 공공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및 과학기술 협력 모델 등 다층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여 유지·확대에 나가야 함.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각론 2): 주요 분야별 정책 과제

① 산업정책

● [국내 산업정책 과제 1]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 [필요성] 인구 감소·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두뇌 유출 심화가 증첩되며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인력난 가중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을 보존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시급함.
- [현 제도] 첨단산업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중
 - 2025년 1월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시행되어 산업계 주도의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지원
 - 2025년 11월 정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해 향후 추진할 중점 과제로서 국가과학자 선정 및 육성,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 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 등을 새롭게 설정
- [보완 방향] 산업계 수요에 맞춘 우수인재 ‘활용’에 무게를 둔 정책 조율 및 장기적 인재 축적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 인재 확보 사업이 산업부 및 중기부의 지원 사업과 상호 보완되도록 대상 업종, 지원 시기 등을 정교하게 결합하는 부처 간 협력 체계 마련 필요
 -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한시적 인센티브에 의존하기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축적한 기술 역량이 기술 이전 및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인재 잔류 유인 제공

● [국내 산업정책 과제 2]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 [필요성] 2025년 10월 ‘한미 기술번영 MOU’ 및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대미 투자와 첨단 기술 파트너십 구축이 연계됨.
 -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단순 기초 연구 교류를 넘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실증 및 상용화 단계까지 깊이 있는 윈-윈 협력 성과를 도출해야 함.
- [현 제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실질적 추진 체계로 활용 예정이나 기존 협정의 한계 존재
 - ‘한미 기술번영 MOU’의 후속 이행을 위해 1993년 설치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정보 교환, 인적 교류, 기초 공동연구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AI·6G·양자 등 실증 및 상용화 단계의 민간 협력을 견인하고 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보완 방향] 상용화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협정 개정 및 기술-통상 연계형 거버넌스 구축
 -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민간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 상용화 단계의 실질적 협력 활동을 규정·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EU-미국 간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사례를 참고하여, 핵심·신흥 기술의 거버넌스와 표준, 공급망을 함께 다루는 고위급 및 실무급 연계 플랫폼 구조 모색

● [국내 산업정책 과제 3]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

- [필요성]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협력사의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대응 역량 확보 필요
 - 제조 공정 전 과정에 AI 기반 로봇과 장비를 융합하는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국내 기반 OEM·ODM 공급사가 공정 및 제품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함.
- [현 제도] 부처별로 첨단 제조 공정 도입 및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분리 운영 중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AI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도 기업 중심의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 중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oT,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보완 방향] 부처 간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핵심 공정을 보유한 선도 기업 중심의 산업부 'AI 팩토리 사업'과 중소기업 대상의 중기부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이 끊김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산업부와 중기부 간 공급망 참여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여 단순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하위 협력사(뿌리기업 등)도 AI 팩토리 구축 사업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② 대외·통상정책

● [대외·통상정책 과제 1]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 [필요성] 멕시코 통상환경의 급변 및 2026년 USMCA 공동 검토에 따른 무역장벽 심화 우려
 -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과 미국 소비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USMCA 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생산거점(니어쇼어링 최적지)으로서 가치가 높음.
 - 그러나 최근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해 FTA 미체결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함에 따라, 멕시코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및 현지 투자 기업의 타격이 크게 우려됨.
 - 특히 2026년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 회의에서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중국 우회 수출 규제 등 미국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경우 멕시코 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 [현 제도] 한-멕시코 양자 간 FTA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
 - 한-멕시코 FTA 협상은 2007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멕시코 현지 자동차·철강 산업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왔음.
 - 2022년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가시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완 방향] FTA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및 CPTPP 가입의 전략적 추진
 - 우리 수출 및 투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완화하여 북미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무역협정 체결이 필수적임.
 - 지지부진한 양자 간 FTA보다 협상 난이도는 높지만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누적 원산지 기준을 통해 회원국 간 공급망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전략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장기적 대안으로 바람직함.
 - CPTPP 추진 과정에서 멕시코에 대한 시장 접근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타 회원국의 높은 개방 요구에 대비해 국내 산업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보완책 마련을 병행해야 함.
- [대외·통상정책 과제 2]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필요성]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확대 속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진출을 통한 국내의 제조 생태계 경쟁력 유지
 - 대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하도급 기업이 동반 진출하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 품질 관리 문제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중견 협력사들은 정보, 자금, 인력, 리스크 관리 역량 등 내부 역량이 부족하여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단독으로 진입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 제도] 대기업 협약 기반 정책금융 중심의 지원 구조와 신설 자금의 운용상 한계
 - 수출입은행의 ‘해외 동반 진출 파트너십’,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이 운영 중이나, 대기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 부담 여력을 전제로 하여 대기업의 요청 없이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임.
 - 또한 정부는 정책 금융(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직·간접 수출 규모를 요건으로 해외 법인 설립(예정)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하청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대기업에 주로 납품하여 ‘간접 수출’ 형태로 실적을 올리는 많은 하도급 부품·소재 기업들은 동반 진출 시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맹점이 존재함.

- [보완 방향] 정책 금융 지원 요건 유연화 및 간접 지원(컨설팅 등)의 대폭 확대
 - 단순 수출 실적 요건을 고수하기보다, 전략적 생산거점을 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함.
 - 정책 금융 외에도 경영 및 법률적 조력, 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현지 규제 대응 등을 돕는 컨설팅 형태의 간접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함.
 - 동반 진출 지원 시 해당 기업이 기존 국내 하도급 기업과의 거래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보완책을 통해, 국내 제조 생태계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생을 이끌어내야 함.

③ 국제개발협력 정책

● [국제개발협력 정책 과제 1]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

- [필요성]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생산거점 부상 및 현지 완결형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저렴한 생산 비용,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과거 한국의 ODA는 개별 공장 건설이나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어 현지에 부품·소재, 물류, 인력, R&D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보였음.
- [현 제도] 산업 ODA 거버넌스 및 재원 연계 수단의 체계화 부족
 - 최근 한국의 ODA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독일이나 일본 등 산업 ODA 상위 공여국에 비해 국가전략과 산업·외교전략을 아우르는 최상위 수준의 ‘정합적 내러티브’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민간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제도적 수단의 체계화가 부족한 실정임.
- [보완 방향] 일관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패키지형 산업 ODA 접근
 - 산업 ODA 분야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최상위 전략 문서부터 하위 실행 계획까지 일관된 정책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고유한 ‘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맞물리는 ‘교차점(예: 베트남의 제조업 고도화 - 한국기업의 전자·IT 생산 안정성, 인도네시아의 광물·소재 산업정책 - 한국 배터리·전기차 공급망, 필리핀의 디지털 서비스 육성 - 한국기업의 IT 서비스 다변화 등)’을 발굴하여 ODA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함.
 - 기존의 파편화된 개별 사업 지원에서 벗어나, 물리적 인프라, 제도 및 규제 기반, 기술·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패키지형 ODA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국제개발협력 정책 과제 2]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고도화

- [필요성]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생산 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기여
 - 해외에 투자 및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현지에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생산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어렵다는 점임.
 - 단순 원조를 넘어 현지국의 고급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
- [현 제도]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중심의 TASK 사업 운영 및 한계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도하는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이 개도국 생산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한국의 노하우로 해결해주며 핵심적인 산업 ODA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의 품질 불량이나 공정 비효율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수 인재 확보 및 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는 종합적인 인력 육성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인 상황임.
- [보완 방향] 기술 지도, 인재 발굴, 인력 양성, 채용을 연계하는 ‘TASK+’ (3단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 [1단계: 현장 기술 지도 + 인재 발굴] 현지 생산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TASK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현지 엔지니어·기술자를 선별하고, 한국어와 해당 산업 기초 지식, 한국기업의 생산관리 기법 교육을 실시
 - [2단계: 한국 내 전문 교육 + 기업 인턴십] 발굴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교육기관과 기업의 사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특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인턴십을 통해 기술 역량·조직 적응력·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채용 가능한 인재 풀로 관리
 - [3단계: 채용 연계 + 장기 네트워킹] 훈련된 인력을 현지 복귀 후 한국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자, 협력업체의 기술 책임자로 채용·연계하거나 한국 내 법인에 채용하며, ‘TASK+ 동문 네트워크’ 조직과 5년 단위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 지속적 네트워킹·성과 환류 체계를 운영 **KIEP**



참고문헌

- 구경현, 김혁황. 2020.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구경현, 배찬권, 박혜리, 류기락. 2022.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구경현 외. 2023.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 추정 및 정책 제언 용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_____. 2025. 『해외 신무역장벽 및 통상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연구 용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발간 예정).
-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4)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종덕, 강구상, 최원석, 이현진, 엄준현, 박보영. 2025.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와 통상정책방향 연구』. KIEP 연구보고서 25-18.
- 김종덕, 구경현, 강구상, 김혁황. 2023.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KIEP 연구보고서 23-22.
- Desai, Mihir A., C. Fritz Foley, and James R. Hines Jr. 2009.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 pp. 18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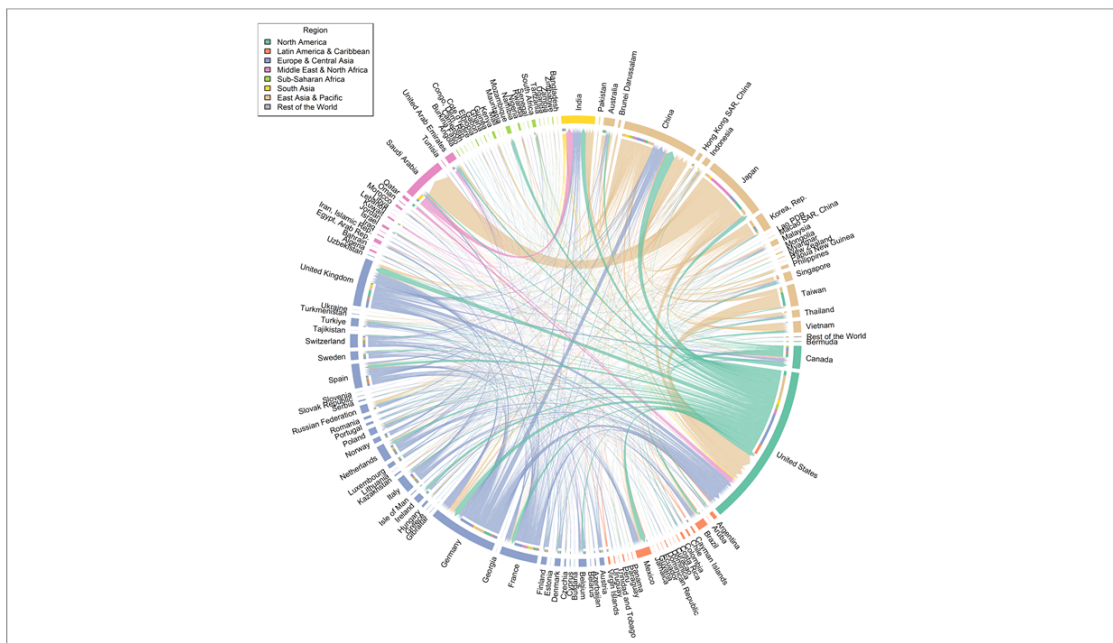
부록

부록 표 1.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변화 결과 요약

산업 및 부문		주요 수입재 부문	주요 수입국	특징
전기 · 전자	반도체	반도체, 기타 화학, 사진광학 → 반도체, 기타 화학, 플라스틱	일본, 미국, 중국 → 중국, 일본, 대만	반도체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일본 투입 감소, 중국 투입 증가 일본과 미국은 반도체 이외 투입 부문도 투입이 활발, 이외 주요국은 반도체 투입에 집중
	통신기기	반도체, 통신기기, 전기제어	일본, 중국, 미국 → 중국, 베트남, 대만	국산재 상품을 수입재 상품으로 대체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일본, 미국 투입 감소, 중국 투입 증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통신기기 투입 증가, 이외 주요국은 반도체 투입 비율 높음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1차철강 → 자동차부품, 자동차, 정밀기기	일본, 독일, 미국 → 중국, 일본, 독일	국산재 상품 투입이 많고 수입재 상품 투입 감소 자동차부품 투입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미국에서 모두 감소 자동차 투입은 독일을 중심으로 증가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반도체 → 자동차부품, 반도체, 1차비철	일본, 중국, 미국 → 중국, 일본, 미국	국산재 상품 투입이 많고 수입재 상품은 다양한 부문에서 투입이 이뤄짐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일본 투입 감소, 중국 투입 증가, 대만은 반도체 투입 증가
석유 화학	석유정제품	원유, 석유정제품, 기타 화학	사우디, UAE, 카타르 → 사우디, 미국, 카타르	원유 투입이 필요하여 수입재 상품 투입이 많으며, 이를 제외하면 국산재로 대체 중 원유 투입이 총수입재 상품 투입의 95%에 달하며, 최근 대미국 원유 수입이 빠르게 증가
	화학	화학, 석유정제품, 기타 화학 → 석유정제품, 화학, 원유	일본, 미국, 사우디 → 미국, 중국, 일본	국산재 상품 투입이 감소하고 이외 부문 투입 단위 모두 증가 미국은 석유정제품을, 중국은 화학을 중심으로 투입 증가 일본 투입은 화학과 기타 화학에서 감소, 사우디 투입은 석유정제품에서 원유로 변경
철강	1차철강	1차철강, 철광석, 1차비철 → 1차철강, 철광석, 석탄	일본, 중국, 호주 → 호주, 중국, 일본	국산재 상품 투입 크게 감소, 국산재 서비스 및 수입재 상품 투입 증가 호주를 중심으로 철광석과 석탄 투입 크게 증가 중국 및 일본은 1차철강 투입에 집중하며, 일본 투입은 감소
조선	선박	1차철강, 일반기계, 정밀기기 → 일반기계, 1차철강, 정밀기기	일본, 중국, 미국 → 중국, 일본, 미국	국산재 상품으로 대체, 저부가가치화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중국(일반기계 중심) 투입 증가, 이외 주요국 투입 감소 1차철강 투입은 일본과 중국에서, 정밀기기 및 기타 금속 투입은 일본과 미국에서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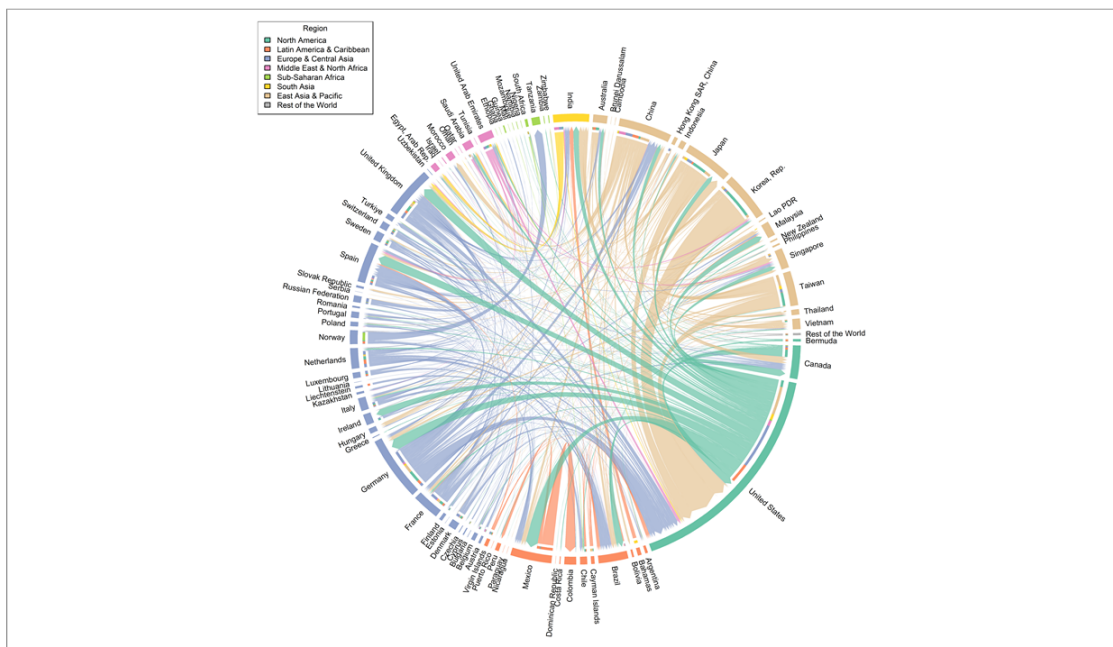
주: 주요 수입재 부문과 주요 수입국은 2005년과 2020년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 1.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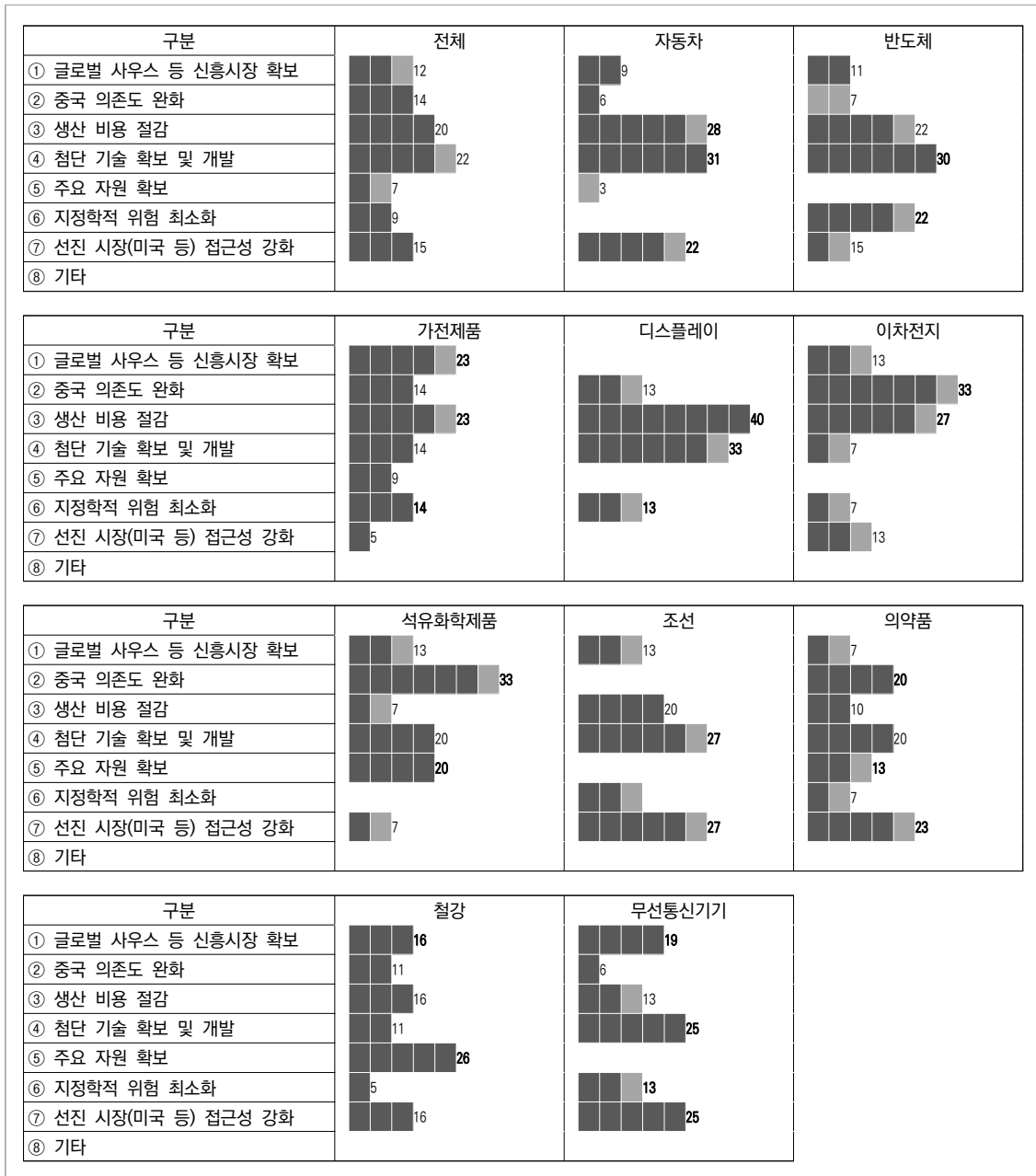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부록 그림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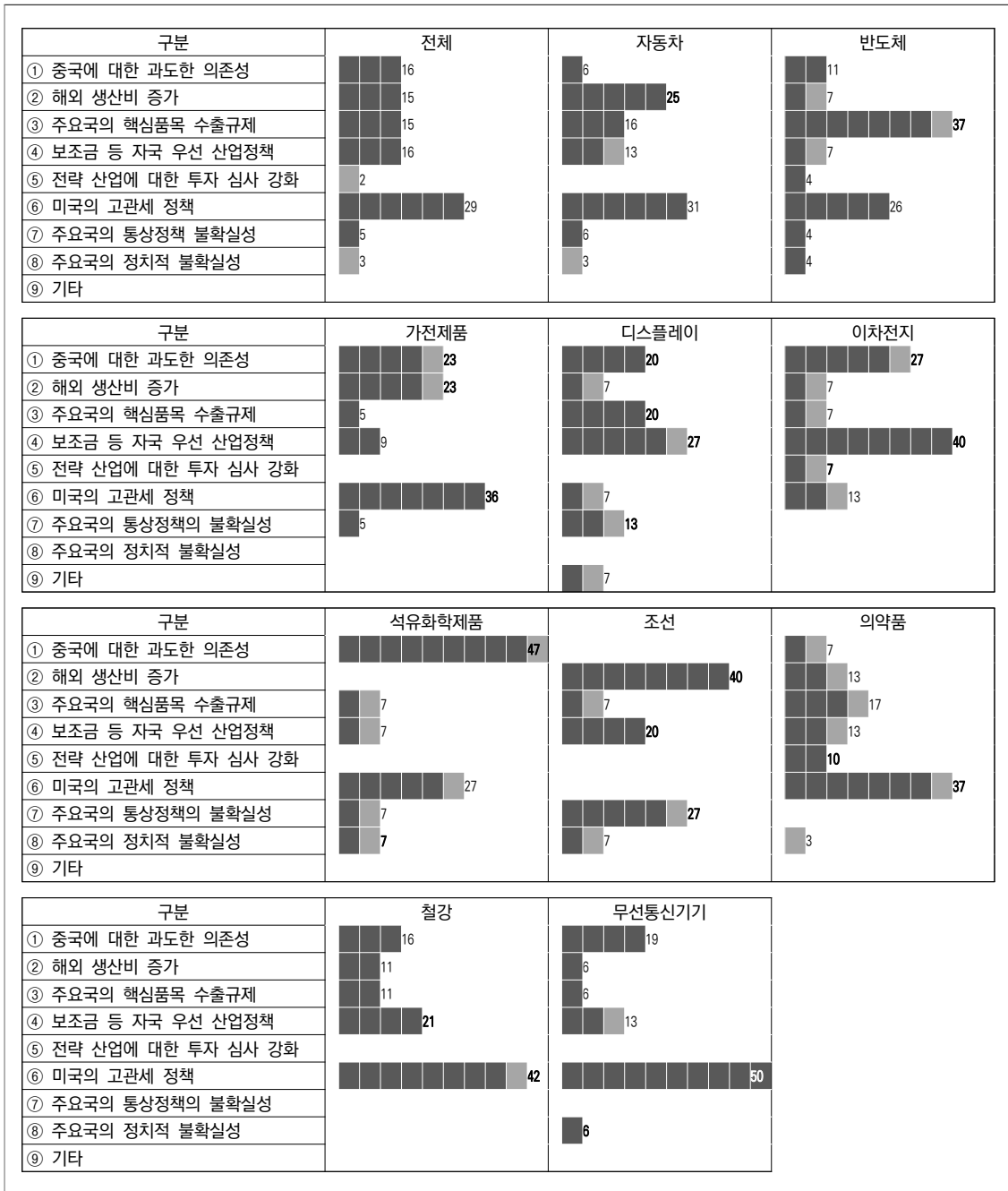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4.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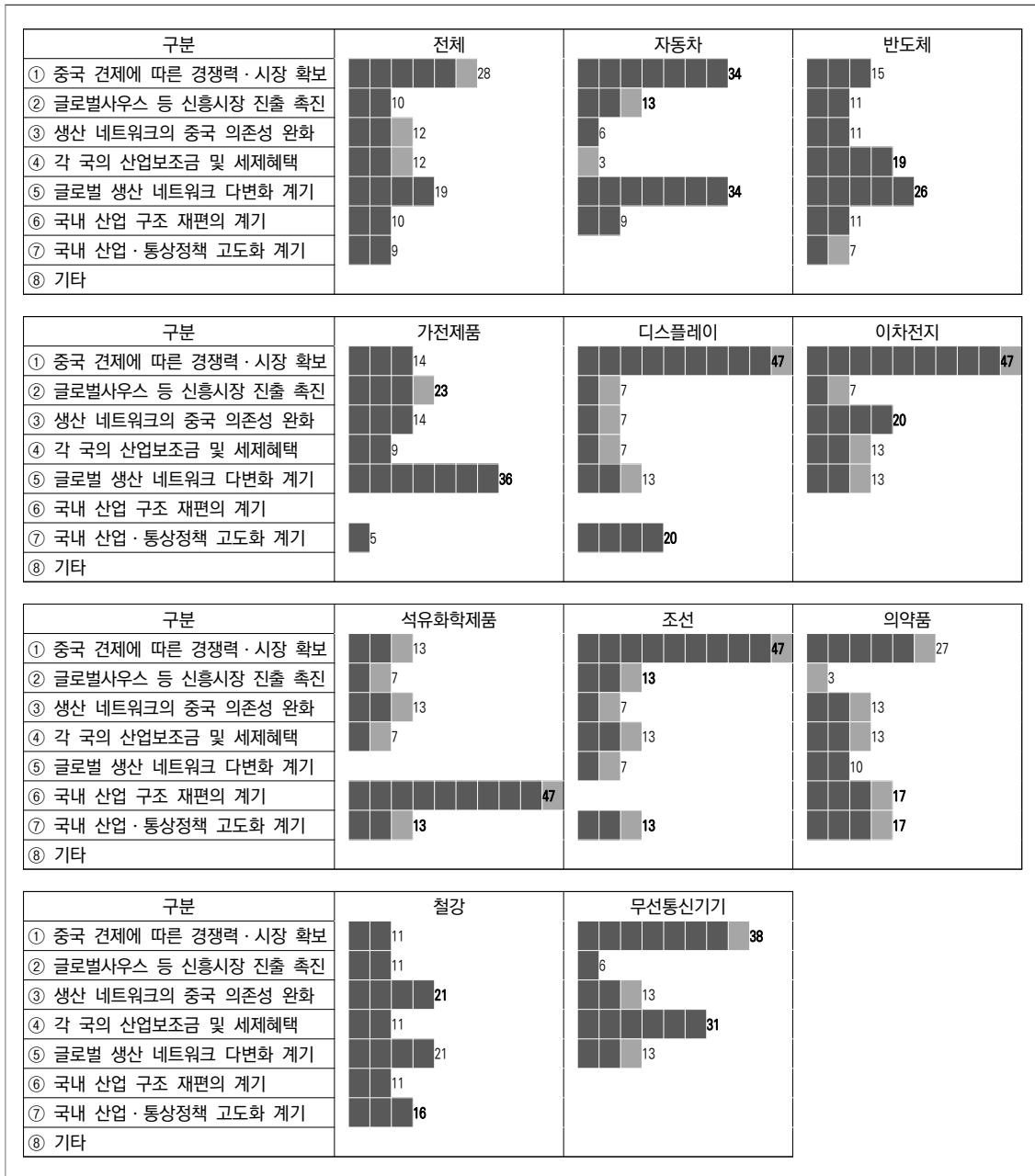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 현재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기회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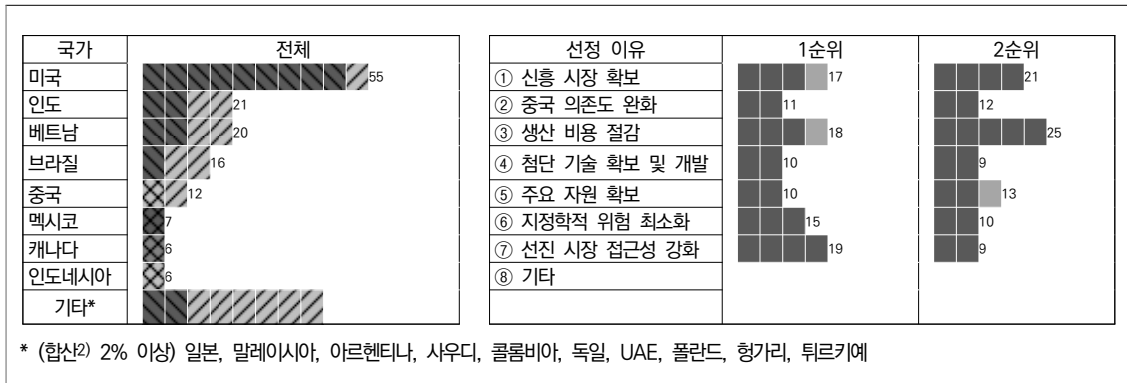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6 . 해외직접투자 확대 우선순위 국가 및 선정 이유

(단위: %, ■: 1순위-5%, ▨: 2순위-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1순위 및 2순위 응답을 단순 합산한 값(예: '미국' 응답은 합산 55.3%(= 1순위 48.5% + 2순위 6.8%)).